일반논문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해석
—투쟁 주체와 결과를 중심으로 임미리

5·18시민군기동타격대원의 생애사를
통해 본 사회적 트라우마티즘 형성 과정 강은숙

일반논문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의 재해석

투쟁 주체와 결과를 중심으로*

임미리

한국학중앙연구원

〈논문요약〉

본 연구는 광주대단지 사건의 두 주체인 철거민과 전매입주자를 이질적이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집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세 가지 차원의 문제를 다루었다. 우선, 사건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끝까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전성천과 전매입주자 중심의 대책위원회의 역할이 과장된 것이고 이는 전성천이 언론보도 내용을 장악한 데 따른다는 것이다. 둘째는 사건 당일 단순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철거민 집단이 시위의 조직과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셋째는 두 집단을 이질적으로 보았을 때 사건의 결과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대책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였지만 이것은 주로 전매입주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것으로 철거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 전매입주자에게 사건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단민원이었으며 이 점에서 사건은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지만 철거민들은 사건 이후 사회적 배제가 심화되면서 더욱 고통을 받아야 했다. 단일한 사건 안에서도 참여주

* 본 논문에 대해 의견을 주신 세 분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체들 간에 착취와 피착취가 이뤄질 수 있으며 대단지 사건에서 그것은 말할 수 있는 자와 없는 자(하위주체)의 차이이기도 하다.

■ **주요어**: 광주대단지 사건, 도시봉기, 하위주체, 철거민, 전매입주자

1. 문제 제기

1971년 8월 10일 6시간 동안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은 3만~6만 명[1]의 주민이 참여한 박정희 정권 최초·최대의 도시봉기로 정부가 주민들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이었다.[2] 그러나 성공이라는 평가는 사건 참여 주체를 동질적으로 보았을 때만 가능한 얘기다. 광주대단지 주민이라고 해서 생활 조건이 똑같은 것이 아니었고, 시위에 참여하는 목적도 달랐다. 그리고 시위 결과를 수용하는 방식과 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광주대단지 사건의 참여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뉜다. 한 부류는 서울시의 도심 무허가 건물지대에 거주하다 강제이주된

1) 이날 모인 군중들은 적게는 3만여 명으로, 많게는 6~7만여 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날 단지 '안' 시장들은 모두 '철시'하고 집회 장소에 모였으며, 당시 실업자 수가 50%를 넘고 있던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5만여 명은 충분히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수는 전체 가구당 적어도 1명씩은 참여한 것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전매입주자들만을 사건의 주체나 주동자로 꼽고 있는 것은 무리가 있는 주장이다(김수현 2006, 64).

2) 『매일경제』, 1971/08/11: "요구 조건 모두 수락"; 『경향신문』, 1971/08/11: "광주단지를 시로 승격"; 전성천(2001): "이 데모 덕택(?)에 최하 8천 원에서 1만 6천 원까지 올려받기로 했던 불하가격은 5백 원에서 2천 원 사이로 재조정되었고, 그밖에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도 모두 관철되었다. 지금까지 '죽음의 도시'로 불리던 광주대단지는 갑자기 '희망의 도시', '삶의 도시'로 변모했다. 주민들은 의욕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다."

철거민들로 이들에게는 도시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황무지 땅 20평씩이 일괄적으로 분양되었다. 또 한 부류는 철거민들로부터 분양증을 매입해 들어온 전매입주자들이다. 그밖에 원주민과 무단 입주자, 세입자들이 있었으나 시위의 주축이라고는 할 수 없다.[3)]

사건의 전개 과정은 단지 내 제일교회 전성천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전매입주자들이 구성한 '분양지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나중에 투쟁위원회로 바뀜, 이하 대책위)'가 주도하고, 8월 10일 시위 과정에서 철거민들이 가세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성천과 대책위를 '사건의 기획자/주체'로, 철거민을 '사건 당사자 그룹'으로, 형사처벌자는 '주동자'로 참여 주체를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하동근 2005), 사건 전체를 관통하는 전성천 목사와 대책위의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평가였다. 이 같은 기조는 1971년 사건 당시 작성된 언론 기사부터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가 없다. 이는 광주대단지 사건 관련 연구가 200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이뤄졌고,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전적으로 당시의 언론 보도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다. 사건 직후 대부분 일간지에서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며, 박기정(신동아 1971), 박태순(월간중앙 1971), 신상웅(창조 1971) 등이 취재한 르뽀 기사가 월간지에 게재되었다. 여기에 당시 서울시 기획관리관으로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했던 손정목의 논문(손정목 2003)이 보태지면서 전성천을 중심으로 한 사건 전개 과정은 기정사실화되었다.

한편 8월 10일 당일 전성천 및 대책위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김수현 2006, 68-69), 전성천 및 대책위와 참가자들 간의 인식 차이를 지적하며 전성천을 광주대단지 봉기의 '의도하지 않은 선동가'로 표현한 연구(김원 2008, 220-222)가 있지만 두 집단의 존재상의 차이를 사건

---

3) 대통령보고서(1971/09/30)에 따르면 원주민 비율은 4%이고 무단입주자를 가수용한 판자집과 천막은 3,148동으로 전체 가옥 23,988동의 약 13%이다. 세입자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결과까지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 지금까지의 언론 보도와 연구 논문에서 보여진,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전성천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온 사건의 전개 과정에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한다. 전성천과 대책위의 역할은 과장되게 서술되어 왔으며, 철거민의 역할은 축소되었다는 게 본 연구의 내용이다. 전성천과 대책위는 사건 전체를 기획한 것이 아니라 발단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반면 철거민 집단은 전성천과 대책위가 기획하고 조직한 사건에 우발적으로 가담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조직 및 홍보 행위를 한 주체라는 것이다.

둘째, 정권의 즉각적인 항복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대책위 측의 평가에 대해서도 재평가하고자 한다. 사건의 주요 참여 세력인 전매입주자와 철거민을 동일한 집단으로 보았을 때는 성공이라는 시각도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광주대단지 이주 동기가 다른 두 집단은 다같이 형편이 어려웠고 대단지 입주 이후로 양쪽 모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그 정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매입주자 중에는 결코 도시 하층민으로 분류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더욱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두 집단은 사건의 기획자와 참여자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넘어 이해와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특히 사건 직후 대책위 측은 한편으로는 시위대를 등에 업고 전매입주자 중심의 요구 사항을 대폭 얻어냈고, 다른 한편 시위 참여자와 명확히 선을 그어 폭력사태의 책임에서 발을 뺌과 동시에 이들이 구속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반면 철거민들의 상황은 적어도 사회적 배제의 측면에서 볼 때 사건 이전보다 훨씬 나빠졌다. 전성천 등이 시위 참가자 및 희생자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빼앗아간 반면 철거민들은 정부의 강제이주에 의해 1차 피해를 당한 데 이어 내부 집단에 의해 또 한 번의 피해를 당한 셈이 됐다.

이상에서 언급한 시위 참여 주체의 구분과 그에 따른 결과의 재해석이라는 연구 목적은 광주대단지 거주민 구술면담 기록[4]을 토대로 하여

기존의 언론 보도와 연구 논문들을 재검토하는 속에 이루어졌다. 구술면담에는 이해학, 하동근, 이태영, 김철, 송상복, 박기연이 참여하였다.[5] 또 사회적 배제와 관련하여 당시 대단지 주민들의 심리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박태순과 윤흥길의 소설을 적극 활용하였다. 박태순은 사건 당시 광주대단지를 3박4일 취재한 후 르뽀기사를 썼으며(박태순 1971), 윤흥길은 사건 이후 대단지에 거주하였다.[6]

2. 사건의 전개와 전성천의 역할에 대한 재고(再考)

1968년 서울시는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350만 평 광주대단지를 철거민 정착촌으로 지정해 1969년 9월 1일부터 강제 이주를 시작하고 20평의 땅을 분양하였다. 그러나 이주민들은 기반 시설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천막이나 판잣집을 지어 생활해야 했다. 광주대단지는 새로 이주해오는 철거민들, 생계가 막막해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철거민들의 분양증을 사서 들어오는 전매입주자들이 뒤섞여 1971년경에는 전체 인구가 약 14~16만 명까지 늘어나 있었다.[7] 이런 상

---

4) 구술면담은 2011년도 국사편찬위원회 구술기록수집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였다.

5) 그밖에 사건 구속자 2인에 대해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수차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였다. 1인은 택시영업, 1인은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면담거절 이유에 대해서는 먹고사느라 매우 바쁘고, 다시는 떠올리지 않고 싶으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김대중·노무현 10년 동안도 바뀐 게 없는데 지금 말해봤자 뭐가 바뀌겠냐 등이다. 특히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1인은 성남시 번호를 단 버스만 보아도 거부감이 들 정도로 성남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다고 말했다.

6) 윤흥길은 1973년 성남시 소재 숭신여자중학교에 국어교사로 부임하였으나 곧 사표를 내고 실직 기간 동안 성남시 단대리 천변부락의 단칸 셋방에서 생활하였다. 이때의 경험이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로 형상화되었다(정희정(2004), 17; 네이버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743443).

황에서 서울시는 비용 회수를 위해 용지 처분을 서둘렀고, 두 차례에 걸친 선거 과정에서 대단지의 투기 붐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 서울시는 분양증 전매 금지와 함께 전매입자에 대해 높은 가격의 토지대금 일시상환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전매입주자 일부가 광주대단지 내 제일교회 목사인 전성천[8]을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대표 박진하)를 구성하였고 1971년 7월 19일 거리 집회를 개최한 뒤 대지가격 인하 및 분할상환, 구호대책 마련 등을 담은 대(對) 정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에 대한 응답 없이 분양가격 인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경기도는 세금을 독촉하였다. 대책위는 '투쟁위원회'로 전환하였고, 8월 10일 마침내 최소 3만, 최대 6만 명이 참여하는 광주대단지 사건이 6시간 동안 벌어졌다. 〈표 1〉은 사건 전개과정을 일자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건의 전개 과정에서 전성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광주대단지 사건의 기획자이자 주관자로 알려져 왔다. 당시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고, 이후 연구자들도 그대로 수용했다. 그리고 전성천 자신도 2001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유사하게 주장하였다.

전성천은 자서전에서 "광주대단지의 유지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데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으나 나는 이를 한사코 사양하고 그냥 고문으로 참여하겠다고 설득했다"고 하면서(전성천 2001, 211), "이번 광주 대단지의 '데모'는 내가 시무하던 제일교회가 사실상 주동체였다. 그 표면적 책임체가 '광주대단지 불하가격 시정

---

7) 광주대단지 현황 대통령보고서(1971/10/14)에는 광주대단지 138,867명, 성남시사5(2004, 87)에는 159,557명.

8) 전성천은 1913년생으로 일본 청산학원대학과 미국 프린스턴과 예일대학을 졸업했다. 자유당에서 공보실장(문공부장관)을 지냈으며 1958년에는 국회의원선거에 자유당 공천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4·19 이후 3·15부정선거 주범으로 구속되어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며, 5·16으로 1년 만에 출감했다.

〈표 1〉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전개 과정

일자	사건	내용
1970.07.13	1차 전매행위 금지 조치	전매입자 분양 재계약 및 일시불 지급, 철거민 택지대금 일시불 지급
1971.04.27 1971.05.25	제7대 대통령선거 제8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 남발, 차지철 후보 “토지무상양여, 5년간 면세” 약속
07.13	2차 전매행위 금지 조치	전입자 분양 재계약 및 일시불 지급, 철거민 택지대금 일시불 지급
07.17	불하가격시정대책 위원회 구성	100여 명이 제일교회에 모여 11명 대책위 구성. 고문에 제일교회 전성천 목사, 위원장에 박진하 장로
07.19	유지대회	2,000명 결집. 각 구마다 2인의 대표 추가해 33인으로 대책위 구성
07.24	서울시·경기도 출장소에 결의문 제출	15,000가구 날인을 거친 결의문 제출
07.28	대책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개편	33인 위원에 184개 단지 당 1명씩의 대표를 추가해 217명으로 대책위 구성. 89개 단지별 1인씩 추가해 총117명이라고도 함. 전단·포스터 작성해 집집마다 배포
08.01	건물취득세 고지서 발부	경기도 성남출장소 명의로 건물 10평당 평균 3,000원 부과
08.03	주민궐기대회 개최 합의	개편대회 열고 8월 10일에 주민궐기대회를 열기로 합의. 광주대단지 출장소장은 서울시 본청에 구원 요청
08.09	투쟁위원회, 서울시 부시장과 협상	서울시 부시장과 투쟁위 대표자들의 협상, 결렬.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장이 와서 협상키로 합의
08.10	8·10소요사태	3만~6만 명 참가
08.12	서울시장 방문 및 사과	전성천 포함 주민대표 4인 서울시장 방문해 난동사태 사과
08.12~13	주모자 구속	12일 12명, 13일 8명 구속, 2명 수배
1972.01.24	구속자 선고공판	2명 실형, 19명 집행유예, 1명 무죄

* 김수현(2006), 전성천(2001), 신상웅(1971), 박기정(1971)을 참조해 재구성

대책위원회'였지만 그 사무소가 제일교회 안에 있었고 그 위원장이 제일교회 장로인 박진하 씨였으며 그 회의와 크고 작은 집회가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교회 전체가 완전히 하나로 뭉쳐서 이 일에 앞장선 것을 보면 더욱 명백한 일이다. … '교회가 왜 이와 같은 거친 일에 앞장서게 되었는가' … 그들의 아픔이 곧 우리 교회의 아픔이요, 그들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였기 때문이다"(전성천 2001, 229)라고 했다. 전성천은 이렇듯 사건의 주동이 대책위도 아닌 제일교회, 즉 전성천 자신이라 주장하며 "광주대단지 시민궐기대회의 배후조정자이기도 했고 실제 주동자이기도 했던 나"라고 단언했다(전성천 2001, 241).

본인이 사건의 '주동체'라는 전성천의 주장은 언론 보도에 그대로 옮겨져 있다. 일간지에서는 전성천을 '주민대표' 또는 대책위원회 회장 등[9]으로 언급하였고, 폭력을 행사한 주민들과는 분명히 구분하면서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다루었다.[10] 월간지 르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며칠씩 취재를 하러 와서 가장 중요한 인물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을 가급적 주민 입장에서 다루고자 한 박태순은 사업소나 출장소 등 사건을 호도할 수 있는 관공서에는 일부러 들르지 않았다고 했지만 전성천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속에 사건 직후 일간지에 보도된 대책위의 역할을 그대로 적고 있다(박태순 1971).

당시 일간지들은 "제일교회 목사로 있는 전성천 씨가 앞장서… ① 땅값을 원입주자들과 같이내게 해달라 ②가옥취득세는 면세한다고 한

9) 「불하가격시정대책위원회 고문」(『경향신문』, 1971/08/11); 「불하가격대책위원회 회장」(『매일경제』, 1971/08/12); 「주민대표 4명」(『경향신문』, 1971/08/13); 「불하가격투쟁위원회 위원장」(박태순 1971).

10) 전성천이 사건의 주역으로 보도되면서도 폭력사태의 책임에서는 벗어난 까닭은 전성천 자신의 정치력 외에 당시 과기처 종합기획실장을 했던 동생 전상근의 역할도 있다. 전상근은 사건 발생 직후 김정렴 청와대 비서실장의 요구로 사건의 중재에 나섰다(전성천 2001, 219-220).

약속을 지켜라 ③단지안 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세월 달라 … 서울시 당국에 진정서를 제출(동아일보 1971/08/11)", "세금면제와 실업자 구제, 토지불하가격인하 등 세 가지 조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을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 (동아일보 1971/08/11)", "각 단지 대표 1백50여 명이 수진리89 전성천씨(전 공보처장, 불하가격시정대책위 고문) 집에 모임을 갖고 대책을 협의 … 9일 하오 2시부터 사업소에서 서울시 행정과장, 주택과장 등이 주민대표 전성천, 박진하 씨와 2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으나 단지대표 1백84명이 몰려와 양시장과 직접 만나겠다고 나서 10일 상오11시까지 양 시장이 오도록 주선(경향신문 1971/08/11)", "플래카드 1천 개와 피켓 약 2천개를 들고 대단지 불하가격대책위원회 주최로 궐기대회 … ①대지분양을 무상으로 하라, ②세금을 면세하라, ③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하라고 요구(조선일보 1971/08/11)" 등으로 보도하고 있다. 사건의 주체로 대책위를 언급하고 있으며, 세 가지 요구사항이 동일하고, 사건 발생 이유로 9일 대책위와 서울시의 협상 결렬을 들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보도의 출처가 대책위와 전성천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즉 전성천은 사건의 기획자이자 동시에 언론 보도의 기획자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신을 폭력 사태의 책임에서는 제외시키면서 빈민들을 위해 앞장선 '성자(聖子)'로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 언론 보도 중에는 심지어 "전성천 박사는 주민들의 소원이 100%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면서 민중의 궐기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았다고 한다."며 전성천을 하느님을 대신한 민중의 영웅으로 치켜세우고, "교회가 50군데나 있는데, 그 교회 목사들은 … '데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랑삼아 변명 … 광주단지에서 제 구실하는 교회는 50분의 1이라 할까?"라며 전성천의 용기와 희생을 치하하기도 했다(김재준 1971). 장관까지 한 사람이 허허벌판에 뛰어들어 목회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에서 대표 노릇까지 하였다. 세상은 전성천을 성자 반열에 올려놓았고, 전성천 역시 그 이름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다. 재야단체도 전성천을 사건의 주역으로 받아들였다. 1971년 8월 30일 민주수호청년협의회 주최로 열린 광주대단지사태 분석 학술토론에서 전성천은 '민권운동으로서의 광주대단지사태'란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동아일보 1971/08/27).

사건 직후 언론 보도에 나온 전성천의 역할과 위상을 증명하고 강화한 것은 손정목[11]이었다. 손정목은 "당시 이 사정을 취재한 한 르뽀기사는 '제헌절인 7월 17일에 아무런 약속도 없이 난민 100여 명이 모였다'(신상웅 1971)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 전성천은 그렇게 허술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한 뒤 전성천의 엘리트 이력과 공보부장관 경력을 소개하였다. 또 "7월 31일까지 그들의 결의 내용이 관철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들어간다는 단서까지 붙"였는데 여기서 말한 실력행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알 수 없다"며 "'시정위원회 4인 대표들은 왜 그와 같은 사정을 시 본청에 가서 직접 진정하지 않았던가'를 의아하게 생각한다. 시장선까지 올라갔다면 기획관리관인 필자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손정목 2003, 100-101).

손정목은 언론 보도보다도 오히려 전성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전성천이 모든 것을 의도하고 예견했음에도 그것을 일부러 숨겼으며 '실력행사'로 표현된 폭력사태까지 전성천이 기획했다는 의견이다. 엘리트 정치인 전성천이 정치적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8월 10일 대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주관했으며, 3만 명까지는 몰라도 1만 명 정도의 대규모 집회는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2]

---

11) 손정목은 1959년 가을 경북 예천군 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전성천과 처음 만났다. 당시 청와대 공보실장으로 재직 중이던 전성천은 고향인 예천에서 국회의원 출마 준비를 하고 있었다(손정목 2003, 100).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손정목은 서울시 기획관리관으로 8월 10일 양택식 부시장과 함께 대책위와의 협상에 참여했다(손정목 2003, 104).

12) 하동근은 손정목이 전성천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한다(하동근 구술 2011/06/02). 하동근은 2005년 광주대단지사건 34주년 학술회의 준비 과정에서 손정목을 만났는데 그때 손정목으로부터 전성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집이 부유했던 전성천은 미국으

손정목은 “이들을 관대하게 다루어 달라는 진정이 줄을 이었다. … 만약에 좀 더 깊이 있게 수사했더라면 전 목사를 필두로 한 투쟁위원회 대표들도 사전모의, 선동·교사죄가 적용되어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며 전성천이 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을 오히려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기술도 하고 있다(손정목 2003, 101).

그러나 이상과 같이 언론과 손정목이 얘기하는 전성천의 역할에 대해 구술자들은 다르게 증언하고 있다. 사건 당일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다음 날 신문을 보고 “세상이 떠들썩한 일을 벌였구나” 하는 생각에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구속을 면했다는 이태영은 “제일교회인가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개입-인용자 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그러니까 그전에 대책위가 구성됐는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대책위가 제대로 부각된 거는 저기 뭐야 그 10일날 뒤에서부터 부각된 거지 그전에는 통장들이 주로 했어요.”라고 증언했다(이태영 구술 2011/06/02.). 또 먼저 검거된 이웃사람의 자백으로 뒤늦게 구속된 송상복은 “저는 목사님은 데모 사건 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 목사가 있고 무슨 무슨 대책위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저희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데모 사건 나기 전까지”라며 이태영과 유사한 내용의 증언을 했다(송상복 구술 2011/06/10). 김철 역시 “그때는 모르겠어요. 모르고.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라고 증언을 했다(김철 구술 2011/11/10). 김철은 사건 당일 경찰 저지선을 뚫고 서울로 나가려던 차량에 다른 참가자 5명과 함께 탑승했던 사람이다.

전성천의 존재를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게 세 명 구술자의 공통된

로 유학을 가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손정목 본인은 가정 형편 때문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하고 행정고시를 통해 관직으로 나갔다는 것이다. 1928년생인 손정목이 1913년인 전성천에게 느꼈을 감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도 동향 사람인 전성천에 대해 일반적인 관심을 넘어섰을 것임은 짐작이 간다.

주장이나 박기연은 다른 증언을 하고 있다(박기연 구술 2011/11/09). 박기연은 사건 당일 전성천 목사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럼요. 찌라시가 오고 통보가 왔으니까"라고 답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돌린 찌라시에 고문 직함의 전성천 이름이 찍혔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은 기억을 못 하더라"는 면담자의 얘기에는 "못하지. 다 우리 동생들이야. 나만큼 나이 먹은 사람들이 없어"라고 증언했다. 박기연은 사건 당일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으나 평소 경찰에 "이름이 올라 있던" 까닭이라 "죄 없이" 구속된 사람이었다. 박기연은 21세의 나이 외에도 "성남에서 콩쿨대회도 하고 모란 극장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껄렁껄렁하고" 다녔던 사람이었기에 전성천이란 지역 거물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구속자들은 박기연의 주장처럼 나이가 어리거나 지역일과는 무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성천을 모를 수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들이 사전에 전성천의 존재를 몰랐을 뿐 아니라 사건 당일 시위 현장 어디에서고 전성천과 대책위의 존재를 짐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8월 10일 당일 사건을 진두지휘했다는 전성천의 주장에 대한 김수현의 지적을 보자.

> 전성천과 투쟁위원회는 당시 사건을 진두지휘하지 않았다. 차라리 투쟁위원회는 사건이 거칠게 폭발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대중들이 '모르게' 협상 장소를 옮기는 등 사건을 벌인 대중들과는 차별적인 행동을 취했다. 단적으로 전성천은 한 인터뷰에서 '당시 사건이 그렇게 확산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당시 8월 10일 집회 신고를 경찰에 신고할 때도 '자칫 터질지도 모르는 폭력사태에 대비해서 사전에 경찰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고, 사건 직후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동요하지 말라'고 설득하기도 했다. … 전성천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사건은 자신이 청와대 비서실과 서울시 측과 전화 협상을 통해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약

속을 받고 '높은 단상 위에 올라' 서울시의 약속을 알리면서 군중들의 행동을 제지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군중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소란스런 상태였으며, 군중들은 넓은 구릉지대에 넓게 퍼져있었던 상황에서 '높은 단상'에 올라 군중들을 지도할 수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차라리 이 사건은 저녁이 되고 요구조건이 합의되었다는 소식이 소문처럼 입에서 입을 통해 전달되자 자연 소멸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 2006, 68).

사건 당일 대회 장소로 정해진 곳은 출장소 인근이었고 출장소 방화 후의 이동 경로는 우연적으로 이뤄진 것이었다. 전성천이 단상 위에 올라가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구술자들도 같은 증언을 하고 있다. 이태영은 "기동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 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 들어주기로 했다고, 이제 그만 하라고 … 누가 전달을 한 거에요, 대책위에서 누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이태영 구술 2011/06/02). 사건 이전부터 유일하게 전성천의 존재를 알았던 박기연을 포함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구술자 네 명 모두 당일 전성천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전성천은 단상 위에 올라가지 않았고, 다만 회의 내용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졌던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건 당사자들도 그 존재를 몰랐던 전성천이 사건에서 적극적 역할을 했다고 굳어진 것은 사건 직후 언론 보도 및 전성천에 대한 손정목의 시각과 관련이 있다. 사건 직후 언론 보도는 정확히 전성천의 의도와 맞아떨어졌다. 언론에 보도된 전성천은 대책위의 대표로 사건의 주동자였지만 폭력 사태와는 구분되는 사람이었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광주단지에 일부러 찾아든 순교자였다. 그리고 손정목은 폭력사태까지도 전성천이 기획하고 예견한 일이라며 전성천을 광주대단지 사건 전 과정에 걸친 기획자이자 주관자로 규정했다.

3. 대책위의 성격과 기획의 진실: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단민원

8월 10일 전성천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다. 7월 17일 처음으로 제일교회에 모인 '난민' 100여 명도 "아무런 약속 없이 모인 사람들"이었고, 7월 19일 유지대회도 2,000명이나 모일 줄 몰랐다고 했다. "원래는 제일교회에서 하려다가 사람이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장소를 옮겼다"고 했다(신상웅 1971, 129). 8월 10일 당일도 마찬가지였다. 당일 집회 신고를 할 때도 "자칫 터질지도 모르는 폭력사태에 대비해서 사전에 경찰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수만 명이 모일 줄은 몰랐다(전성천 2001, 211). 하지만 전성천이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고 의도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전성천이 의도하고 예견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전매입주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단민원이었다. 그리고 사건의 출발점에는 다수의 전매입주권을 가진 유지들이 있었다.

1971년 8월 10일 6시간 동안 전개된 광주대단지 사건은 전성천·박진하를 비롯해 소위 대단지의 유지들로 구성된 '시정위원회' 및 '추진위원회'가 전매입주자들을 결합시켜 기획한 집단민원이 예상을 벗어나 철거민들과 기타 공조세력이 참여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확대된 것이었다. 여기서 유지들과 전매입주자들은 일부 이해를 공유하며, 유지들과 철거민들은 이해가 상반되는 적대세력이다. 또 철거민들과 이해 또는 정서를 공유한 '기타 공조세력'으로는 모란단지 입주자가 있다.

1971년 7월 17일 처음으로 불하가격시정위원회를 조직했던 사람은 대단지의 유지들이다. 하동근은 "유지란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지역에 기여하여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일"이기에 유지란 표현은 "당시에 나온 것은 아니고 아마 이후에 그리 지칭했을 것"이라 말했다(하동근 구술 2011/06/02). 그러나 유지라는 말은 광주대단

지 사건 직후 대단지에 들어와 4박5일 취재를 한 박태순의 월간중앙 르뽀에도 등장하고 박기정과 신상웅의 르뽀기사에도 유지들은 사건의 기획자로 서술됐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전성천이 회고록에서 유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성천은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광주대단지의 유지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 데모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성천 2001, 209)"고 쓰고 있는데, 박태순을 포함해 사건 직후 광주대단지를 취재한 기자들이 유지라는 말을 쓴 것은 전성천 때문이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전성천과 박진하를 포함한 33인의 유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유지가 있을 수 없는 구조에서 유지를 자처하고, 또 전성천이 기꺼이 유지라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마을이나 지역에서 명망 있고 영향력을 가진 사람'[13]을 뜻하는 유지는 대개 공동체 내에서 비교적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광주대단지 경우 공동체가 형성되기 전이라 단지 내에서 명망이나 영향력을 얻은 사람을 없었음에도 굳이 유지라는 표현을 썼다면 그것은 재력을 가진 사람을 뜻할 것이다. 전성천은 1백99평 대지의 방 7개짜리 양옥을 판 돈 850만 원을 갖고 들어와 분양증 5매를 구입해 100평 부지에 교회를 건립했으며, 수색에 있는 땅 5,000평을 팔아 교회 운영자금을 마련할 정도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전성천 2001). 박진하의 경우, 수백에서 수천 장의 분양증을 가진 '재벌'이었고(이해학 구술 2011/06/08), 수백, 수천까지는 모르지만 상당한 수의 분양증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한다(하동근 구술 2011/06/02).

이렇듯 사건의 기획은, 대단지의 처참한 상황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대단지를 모종의 기회로 삼은 분양증 부자들, 그리고 이들과 이해가 일치하는 전성천과 같은 또 다른 유지들이 모여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기획은 봉기도 아니었고 항거나 항쟁도 아니었다. 시정위원회나 투쟁

---

13)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유지**03(有志)[유:-].

위원회가 기획한 것은 광주대단지 사건이라는 생존권 수호 투쟁과는 동떨어진 별개의 무엇이었고 그것은 바로 재력가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단민원이었다. 집단민원은 5세대 이상의 공동된 이해와 관련하여 5인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으로 33인 위원들의 행위 수준은 딱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14] 33인 위원들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완전히 구분되는 것은 이들은 대단지 입주를 전후해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배제당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격리되고 배제당해 불만과 공포를 쌓아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광주대단지를 기회로 삼아 의식적으로 이를 이용하려고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시위 참가자들과 다르며 이들이 처음 기획한 것의 성격도 3만~6만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이들은 다를 뿐만 아니라 도시 빈민에 대해 적대적이기까지 했다. 전성천을 포함한 주민대표 4인은 사건 직후인 8월 12일 양택식 서울시장을 방문해 난동사태를 사과했다. 그밖에도 사건 당일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 챈 이들은 모두가 사는 길보다는 자신들이 사는 길을 택했으며 처벌을 면하기 위해 폭력사태로부터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분리시키고자 노력했다. 이들의 노력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명에 그치지 않고 '난동자'들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피고인 등은 입주자 약 삼만여 명과 공모하여 집회 주최자 박진하의 집회종결선언 및 관할경찰서장의 해산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 시위를 감행"했다고 나와 있다.[15] 사건을 공모한 것은 '위원회'가 아니라 당일 현장 참가자들이며, 이들은 박진하의 집회종결선언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폭력시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이다. 전성천의 회

---

1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다수인 관련 민원."

15) 「항소장 제출 통지문」. 1972/02/10(재판장 박충순): 1972/01/29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1972/02/02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을 피고 송상복에게 통지하는 내용.

고록에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유지들의 이러한 시각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성천 자신의 이율배반적인 시각도 여러 군데 드러나고 있다.

> 광주대단지 시민궐기대회의 배후조정자이기도 했고 실제 주동자이기도 했던 나(전성천 2001, 241)였지만 그 폭동에 있어서는 나나 우리 간부 누가 가담했다거나 선동한 일은 전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데모의 진압을 위해서 온갖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군중 속에 뛰어들기도 했다. … 결국 나는 검찰에도 몇 번이나 호출을 받았고 이 검거자들의 변호사 비용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 다행한 일은 이 젊은이들(21명-인용자 주) 외에 나나 나의 동지들은 법적 문책은 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인용자 주)(전성천 2001, 235).

시위는 본인이 주동했지만 폭력 사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성천이 검거자들의 변호사 비용을 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김철은 "내가 알기로는 국선변호사 말고는 변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으며(김철 구술 2011/11/10), 박기연은 전성천 목사가 변호사를 대주었냐는 질문에 "그건 우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지"라고 답하여 당시 변호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박기연 구술 2011/11/09). 또 송상복은 "변호사는 그때 국선 변호사인지, 목사님이 선임했는지 잘 모르겠네"라고 했다(송상복 구술 2011/06/10).

전성천은 폭력 사태를 야기한 사람들은 처벌받아도 마땅하고, 폭력 사태에도 불구하고 데모는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했다. 또 전성천에게 성공한 데모의 공로자는 구속자들이 아니었고, 사건의 희생자 또한 구속자들만은 아니었다. 아래 전성천의 말에 따르면, 공로자는 교회 신도들이었고, 희생자는 공무원과 경찰들이었다.

초창기에 있었던 데모가 오늘의 성남시에 밑거름이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데모를 성공리에 이끌기까지에는 성남교회[16]의 교우 전원의 정성어린 수고와 봉사가 있었다. 특히 데모대의 총인솔자였던 박진하 위원장을 비롯하여 2백여 명의 간부들의 피눈물 나는 수고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전성천 2001, 237).

데모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큰 희생을 당한 분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감사한 생각을 아울러 느끼게 된다. 특히 당시 광주경찰서장이었던 김주동 씨가 관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광주군수였던 황두영 씨가 좌천을 당한 것 외에 많은 공무원이 문책을 받게 되었으니 말이다. … 한때의 공분(公憤)에 못 이겨 폭동을 일으키게 되어 교도소까지 끌려가 옥고를 치른 20여 명의 젊은이들의 희생도 잊을 수 없다. 그리고 데모대가 던지는 돌아 맞아 몸에 부상을 입고도 발포를 하지 않고 부동의 자세로 그 의무를 다한 경찰관들의 인내와 용기를 지금도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전성천 2001, 240).

전성천의 말대로 대책위 간부들의 수고와 옥고를 치른 젊은이들의 희생의 결과로 얻어낸 것은 '토지불하가격 인하'와 '취득세 면제'라는 재산권 보호였다. "(철거민과 전매입주자의) 불하가격에 차등을 두는 것을 시정해서 같게 해달라는 첫 번째 목적을 다 이룬 셈(전성천 2001, 226)"이었기 때문에 전성천에게 데모는 바로 '성공' 그 자체였다. 그러나 뒤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나머지 생존권 관련 대책들은 실효가 적거나 공약(空約)에 그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불하가격 시정'으로 대표되는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욕망,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의 '집단민원'만이 유일하게 유지들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끝까지 관철한 의미 있는 행위였다.

---

16) 광주대단지 제일장로교회(인용자 주).

4. 광주대단지 사건의 조직 및 홍보 주체: 과거 통반장했던 사람들

광주대단지 사건은 "전매입주자들이 똘똘 뭉쳐서 들고 일어난" 데에다 "철거민들이 더욱 열렬히 앞장을 섰던"(박태순 2001, 259) 박정희 정권 최초의 '도시봉기'(김원 2006)이다. 전성천과 유지들이 기획한 것이 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집단민원이었다면 애초 기획과 달리 3만~6만 명이 참여한 거대한 도시봉기로 발전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전성천의 말처럼 단지 광주대단지의 처참한 환경이 예상을 벗어나 '저절로' 사람들을 결합시키고 사태를 폭력시위로 발전시킨 것일까? 아니면 전성천이 예상치 못하는 사이에, 또는 전성천이 모른 척하고는 있지만 누군가 또 다른 개입이 있었던 것일까? 비밀은 '과거' 서울 살 때 통반장했던 사람들의 조직에서 찾을 수 있다.

8월 10일 당일 시위 현장의 맨 앞에 있었던 이태영의 얘기를 들어보자.

> 국회의원 취임식 바로 다음 날 땅값 내라 이런 통지가 날아들기 시작했다던데, 좌우지간 쪽지를 반장 통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 당일 전에 그날 집회하니까 그러니까 집회라고 안 그러고 항의하러 가자고 …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야 된다. … 통장 반장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거고 그 사람들이 동원을 한 거에요. … 태평동 쪽에 사는 무슨 교회, 제일교회인가 그 정도만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인제 자세히 얘기 들은 거구요. 근데 인제 주축은 좌우지간 통장 반장들이 주축이었어요. … 그러니까 통장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 힘든 거고 그리고 인제 그런 문제는 자기 문제이니까 해결하려고 했던 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통장들이 그냥 가서 저기 뭐야 모이자고 하고 통장들이 그거(포스터 등-인용자 주) 다 써서 붙이고 그랬어요. 그 지금

그 사람 이게. 무슨 제일교회인가 그 목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 (개입-인용자 주)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 그게(포스터 빨간 글씨로 쓴 것-인용자 주) 통반장이 한 거에요. 동네 사람들을 다 이제 불러서 쓰라고 그래서 쓴 거고요. 플래카드는 아마 통반장 대책위에서 만든 것 같은데요. 플래카드도 있긴 있었는데 몇 개 없었구요(이태영 구술 2011/06/02).

여기에 따르면 8월 10일 대회를 홍보하여 사람들을 조직하고, 당일 사용된 전단과 포스터를 제작한 것은 '통반장'들이었다. 다만 제작비가 필요했을 플래카드만큼은 대책위에서 만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이태영의 구술에서 '통반장'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행정기관에서 통반장으로 임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순히 통반장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서울시는 한 구역을 한꺼번에 철거했고 그 구역에 살던 철거민들을 함께 이주시켰기 때문에 광주단지 와서도 서울의 이웃끼리 가까운 곳에 살게 되었으며 서울서 통반장 했던 사람들은 여기 와서도 그대로 역할을 계속하게 되었다. "행정 단위가 없어 전에 통반장을 지낸 사람들이 단지사업소와 성남출장소를 왔다갔다 하며 당국의 지시를 구두 전달"했다(조선일보 1970/11/15).

그렇다면 통반장들의 활동은 대책위원회의 지시나 권유에 따른 것일까? 적어도 전성천의 회고록에는 통반장에 관해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 대책위에서 의식적으로 통반장 조직을 홍보에 이용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통반장들은 대책위 구성원들과는 존재 기반이 달랐기 때문이다. 대책위가 전매입주자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통반장들은 철거민이었다. 또 통반장들이라고 해서 생활 수준이 나았던 것도 아니다. 구술자 김철의 경우 용산 살 때 통장을 했던 부친이 대단지 와서도 통장 '역할'을 했는데 땅을 분양받은 뒤에도 집을 짓지 못하고 사건 당시 다른 세 가구와 함께 천막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먹을 것도 없던 상황에 블록과 시멘트를 사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김철의 가

〈표 2〉 광주대단지 현황(대통령보고서 1971/10/14)

1. 면적		350만 평(12km²)[17]
2. 주택면적	조성계획	111만 평
	조성면적	72만 평(그중 분양면적 45만 평)
3. 인구	총계	138,867명
	원주민	4,653명(1,025세대) 4%
	이주민	135,214명(29,746세대) 96%
4. 취업상황	경제활동가능인구	42,173명: 전인구의 30%
	정상취업	16,750명: 활동가능인구의 39.7%
	비정상취업	15,660명: 활동가능인구의 37.3%
	실업자	9,773명: 활동가능인구의 23.0%
	※ 취업알선대상	25,433명: 활동가능인구의 60.3%
5. 가옥	전체가옥	23,988동
	정상가옥	14,868동: 전가옥의 62%
	비정상가옥	9,120동: 전가옥의 38%
	※ 가수용분	3,148동
	판자집	2,299동
	천막	849동
6. 생활 및 교육수준	월평균 만 원 이상 수입자	77.0%
	중학졸업 이하의 학력소지자	67.7%
	판자집 천막 거주자	38.0%

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철거민들이 맨땅에 기둥만 박아놓은 땅을 불하받기는 했으나 집을 지을 형편이 못되었다(김철 구술 2011/11/10). 1971년 현재 광주대단지 내 주민 구성은 철거민이 4만 1,596명으로 29.8%, 일반전입자가 6만 8,623명으로 49.3%였다(대통령보고서 1971/10/14). 따라서 〈표 2〉의 '정상가옥' 대부분은 일반전입자, 즉 전매입주자와 원주민

17) 성남시의 2011년 현재 면적은 141.72km²(42,870,300평), 인구는 958,349명이다. 광주대단지가 있었던 성남시 중원구는 26.38km²(7,979,950평)에 인구 256,761명으로 현재 성남시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한 곳이다. 이것과 비교해서도 350만 평에 35만 명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것인지 짐작할 수 있다.

들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철거민들은 당시까지도 천막, 판자집 등 '비정상가옥'에 살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불하가격 시정이라는 목표가 분명하였던 대책위에서 천막이나 판자집에 거주하던 통반장들을 쉽게 동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건과 관련한 통반장들의 활동은 전성천이나 대책위원들이 의도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자발적인 것이었다.

유지들이 기획한 집단민원은 7월 19일 '유지대회'를 끝으로 유지들의 손을 떠나게 된다. 대책위원회도 예상치 못한 2,000명의 인원이 유지대회에 참여하고 15,000가구가 결의문에 서명해 제출할 때부터 이미 '과거' 통반장 했던 사람들의 조직망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통반장 조직망이 가동된 시점이 유지대회부터인지 8월 3일 주민궐기대회를 열기로 한 이후부터인지는 정확치 않고 전매입주자가 아니라 철거민들인 이들이 왜 엄연히 '불하가격시정' 명의의 집단민원에 개입하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통반장들이 홍보 및 조직 과정에 결합하면서 사건은 이미 전매입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다. 자신들부터가 이미 전매입주자가 아닌 전직 통반장들은 '불하가격시정' 대회의 홍보 대상을 철거민들에게 확대시켰다. 통반장들의 활약상은 구술자들의 말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태영과 송상복은 7월 19일 유지대회와 8월 10일 궐기대회가 아니어도 산발적인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 모두를 통반장들이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이태영 구술 2011/06/02; 송상복 구술 2011/06/10). 이미 8월 10일 이전부터 전성천과 유지들의 의도와는 별개로 통반장 조직이 움직였고 이주민들 역시 전성천과 유지들(대책위원회)의 존재를 모른 채 통반장과 일체가 되어 움직였던 것이다. 구역별로 통반장들이 홍보하고 다닌 것은 '불하가격시정' 대회가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항의대회'였으며 대상도 철거민까지 망라하였다.

8월 10일 사건 당일에 전성천과 유지들의 예상을 벗어나 예기치 않게 철거민들이 대거 결합하면서 사건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했던 것이라

기보다 이미 그 준비 과정부터 철거민의 이해가 반영되고 이들이 적극 결합하여 8·10대회가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통반장과 철거민들은 전성천과 대책위가 기획한 대회에 우발적으로 결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항의대회'에 8월 10일이라는 날짜를 이용했던 것이다. 이날의 봉기성은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불가능했다. 적어도 '정상'으로 복귀하려다 실패했거나(또는 실패를 예견했거나), '격리되고 배제'되어 불만과 공포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광주대단지에서는 철거민들이 바로 그들이었고, 1970년대 한국사회의 하위주체였다.

그렇다면 철거민들은 왜 별도로 스스로를 조직하지 못하고 '불하가격 시정'을 위한 전매입주자들의 집단민원에 의지해서 행동을 해야 했을까? 또는 왜 처음부터 철거민들과 전매입주자가 함께 일을 도모할 수는 없었을까? 스스로 항의를 기획하고 사람들을 조직할 '의식'이 없어서일 수도 있겠으나 그 이전에 광주단지에는 이들이 소통할 만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재했다. 광주단지에는 '광장'이 없었다. "하나의 도시를 만든다면 반드시 중심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광주단지는 중심가가 없다. 광장도 없고, 구심점이 될 만한 장소도 없다. 그냥 퍼져 있는 상태"였다(박태순 1971, 286).

광장이 없는 광주단지에서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이주민들은 서로 소통할 방법이 없었으며 이 가운데 막대한 재산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 유지들은 대단지 최고의 이력을 가진 제일교회 전성천 목사를 찾아가 호소했고, 유지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전성천은 이들의 요청을 수용했다. 물론 이것은 주민들 간의 소통의 결과는 분명 아니었다. 제일교회에서는 불만과 공포를 전유하는 광주단지의 입주자들의 소통이 이뤄진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유지들이 그들의 욕망을 확인하고 촉진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소통 공간을 가지지 못한 주민들 간의 소통은 통반장 조직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소통 구조의 담당자, 즉 철거

민으로서 통반장들이 처한 입장과 원하는 뜻이 전파되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조직되었다.

5. 사건의 결과 1: 전매입주자에 편향적인 정부대책

시위를 주도한 '분양지불하가격시정위원회(대표 박진하, 49세)'의 요구사항은 ①대지가격을 평당 1,500원 이하로 인하해 줄 것, ②불하가격을 10년간 연부상환토록 해 줄 것, ③향후 5년간 각종 세금을 면제해 줄 것, ④영세민 취로장 알선과 그들에 대한 구호대책을 세울 것 등이었고(김수현 2006, 59), 시위 당일 양택식 부시장의 합의 사항은 ①전매입자들의 대지가격도 원 철거이주자와 같이 취급한다, ②주민복지를 위하여 구호양곡을 방출하고 자조근로공사를 아울러 실시한다, ③경기도 당국과 협의하여 취득세 부과는 보류토록 하겠으며 그밖의 세금도 가급적 면제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겠다, ④주민들은 당국과 협조하여 계속 지역 발전에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 등 네 가지였다(손정목 2003, 104).

사건 이후 정부는 청와대까지 나서 신속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했다. 사건 다음날인 8월 11일 바로 관계부처회의가 소집되어 광주대단지를 독립된 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을 발표하였고,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①지방세는 경감이 가능하나 완전면세는 어렵다 ②땅값은 현재의 8천~1만 6천 원선에서 대폭 내린다, ③요구호 대상자 2만 명에게 양곡 2천5백 톤을 긴급방출한다, ④생활안정을 위해 직업안정소를 설치한다, ⑤착공중인 40개의 대소공장을 빨리 완공시켜 이들을 취업시킨다, ⑥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를 빨리 정비한다고 발표했다(경향신문 1971/08/11). 그러나 성남시 승격은 진작부터 나오던 얘기였으며(동아일보 1971/02/03) 내무부에서 올린 대통령 보고

서(1971/08/04)에도 “위성도시인 지방자치단체로 개발”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광주대단지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최종 정리해 1971년 10월 15일 대통령이 결재한 내용은 ①서울시와 경기도로 이원화된 사업은 경기도로 일원화, ②월동대책비로 5억 원(서울시 기채) 투입, ③취업대책비 10억 원(국고 부담) 투입, ④가내공업센터 6동을 곧바로 착공, ⑤중소기업공장 22개의 추가 가동 등이었다. 전매입주자들의 최대 목표였던 ‘토지불하대금 인하’는 사건 당일 양택식 시장이 전격적으로 수용한 뒤 대통령보고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서울시의 재량사항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월동대책비와 취업대책비의 투입 외에 다른 것들은 이미 진행 중이었던 게 대부분이고 사건으로 인해 시행이 앞당겨진 것이나 새로 시행된 것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광주대단지를 서울로부터 격리시키고 이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되었던 도로 문제는 1971년 9월 3일 대곡로가 개통되면서 크게 해소되는데 이는 개통 시기에서 짐작되듯이 진작에 착공한 공사였으며(서울행정사 2005, 438),[18] 학교의 추가 설립도 이미 진행되던 일이었다. 사건 직후 성남시에 신설된 학교는 대원초등학교(1971/09/01 설립), 상원초등학교(1971/09/01), 희망대초등학교(1971/09/22), 금빛초등학교(1971/11/01), 검단초등학교(1971/11/01), 성남여자중학교(1971/12/31), 숭신여자중학교(1971/12/31)가 전부이며 그 이후에 성남시에 신설 학교가 들어선 것은 성일중학교(1973/12/27), 단대초등학교(1974/11/30) 등이다(성남시사5 2004, 89-95). 사건 대책에 의해 신설된 학교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볼 수 있다.[19]

---

18) 서울시는 1970년에 4억 9천만 원의 예산으로 광주단지에서 말죽거리에 이르는 넓이 30m, 길이 8,500m에 이르는 도로를 새로 개설하지만 1971년 2월 부분개통되고 1972년 말에 준공되었다. 당시의 길 이름은 ‘대곡로(大谷路)’였으나 지금은 ‘헌릉로(獻陵路)’라 개칭된 이 길은 광주대단지부터 을지로5가까지의 시간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개설된 도로였다. 1970년 10월에 잠실대교 가설을 착공한 것도 물론 잠실지구 개발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당면과제는 광주대단지와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 그 첫째 요인이었다.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도 사건 이후 큰 진전이 없었다. 이태영은 가옥별로 상수도를 설치한 것은 2~3년, 또는 4~5년 후로 기억했다. 관청에서 일괄 설치해 준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직접 설치해야 했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빨리 했고, 돈 없는 사람들은 늦게 설치했다고 증언했다(이태영 구술 2011/06/02). 더욱이 1976년 봄이 되어서도 전염병이 만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서울인구사 2005, 1024). 월동대책비와 취업대책비 투입도 이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상황을 바꾸지는 못했다. 사건 후 밀가루는 많이 배급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밖에 쌀이나 다른 곡식을 식량으로 배급한 적은 없었다고 구술자들은 증언했다(이태영 구술 2011/06/02; 송상복 구술 2011/06/10). 취로사업은 250세대당 3장씩 취로증이 나왔다(신상웅 1971, 126).

공장 설립에서는 꾸준한 변화가 있었지만 사건과는 무관하다. 광주대단지에는 1971년 초부터 공업단지가 조성되었다(매일경제·동아일보·경향신문 1971/03/20). 서울시는 이미 2월경에 광주공업단지에 서울시내 2백15개 공장을 연내에 긴급이전시키기로 발표하였으며(경향신문 1971/02/24), 당시 일간지를 보면 이후 공장 입주 소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20] 양택식 서울 시장이 사건 다음 날 "현재 단지 안에 건설 중인 34개 공장을 올해 안에 완공(경향신문 1971/08/12)"하겠다고 발표했고, 대통령보고서에 '가내공업센터 6동 착공 및 중소기업공장 22개 추가 가동'이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확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결국 사건의 결과로 주민 생활 지원 대책이 수립되기는 했지만 실질

---

19) 아무리 날림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시멘트 양생 시간 등을 고려하면 초등학교 하나를 짓는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

20) "大英(대영)타이어－廣州工場(광주공장) 준공," 『매일경제』, 1971/07/28; "광주大團地(대단지)에 12개 業體(업체)유치," 『동아일보』, 1971/07/05; "廣州團地(광주단지)에 8개 공장 모집," 『경향신문』, 1971/06/09.

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한 가운데 유지들의 당초 요구사항이었던 '토지불하대금'과 '지방세' 문제만이 전격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재산권 보호를 위한 유지들의 집단민원이 대단지 빈민들의 봉기 과정을 거쳐 다시 유지들의 민원 해소 차원으로 귀착된 것이다.

6. 사건의 결과 2: 대단지 주민의 사회적 배제의 심화

광주대단지 사건은 결과적으로 대단지 주민들에게 두 번째의 사회적 배제를 가져오고 말았다. 대단지 주민들에게 첫 번째의 사회적 배제는 빈곤에 의한 것이었으며 광주대단지로의 이주 자체가 배제를 의미했다.

1) 광주대단지 이주 및 격리로 인한 첫 번째의 사회적 배제

광주대단지가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서울시 외곽의 철거민 정착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서울시 경계를 넘어선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이태영 구술 2011/06/02; 하동근 구술 2011/06/02; 송상복 구술 2011/06/10)"는 말은 광주대단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비슷한 환경이라면 어디라도 나올 수 있는 말이었고 그만큼 또 비슷한 환경이 도처에 있었다. 1960년대 중반 구로구를 다녀온 한 공무원의 글에도 "비만 오면 진흙탕길에 푹푹 빠지기 때문에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고 했을 정도"라는 표현이 나온다(김희석 1999). 1971년 사당동 지역을 조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집의 건축 재료는 루핑지붕에 판자벽 혹은 천막을 이용한 가건축 상태였으며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식수의 부족이 큰 고통이었다. 집집마다 변소가 없어 산중턱이나 남의 변소를 이용해야 했

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밤에는 석유램프를 사용하는 집이 많았다.

당시 서울시는 사동동지역에 약 4,000명의 주민을 이주시키고 철거민들에게 이주민증을 발급해 한 집당 10평씩의 땅을 분배했다(서울인구사 2005, 1047). 교통수단이라고는 천호동으로 가는 폭 6~7미터의 국도뿐이었다. 서울시는 1억 1,500만 원을 투자하여 11,700m에 달하는 이 길을 포장해서 버스를 통행시켰지만 이 길을 이용하면 을지로5가까지 최소한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버스요금도 시내요금의 2배인 35원을 물어야 했다(서울행정사 2005, 438). 이 같은 물리적 거리는 대개 일터가 서울 도심에 있었던 이주민들의 생계수단을 대번에 바꿔놓거나 일자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결과를 낳았다. 운행시간으로만 1시간 30분이지 정류장까지 가는 시간 등을 모두 합하면 2시간 30분까지 걸리는 거리였다(중앙일보 1971/08/13).

광주대단지는 "아무도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하는 "전설같이 꾸며진" 곳이었고, "세인들의 생활감각으로는 일단 특수하게 느껴지는 지역"이었다(박태순 1971, 254-255). 그래서 박태순은 광주단지를 "별촌동(別村洞)"(박태순 1972)이라 불렀고 윤흥길도 마찬가지로 "별나라 동네"(윤흥길 1977)라 하였다. 광주단지의 이러한 입지 조건은 대단지 이주민들이 일터로 가는 것을 좀 더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아예 차단하기까지 했고, 경제생활 외 다른 부문에서도 주민들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사회로부터 배제시키는 역할을 했다.

1970년 모란단지에 이주한 구술자 하동근의 부친은 원래 쌀가게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광주로 이주한 뒤 한동안은 매일같이 서울 쌀가게로 출퇴근을 했는데 얼마 못 가 쌀가게로 거처를 옮겼다가 수개월 뒤 그만두었다. 그 뒤에는 가마니를 짜서 천호동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마니를 수레에 싣고 걸어서 천호동까지 갔다. 편도로 다섯 시간가량 걸렸기 때문에 해지기 전 집을 나서 서울에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단지 내에 일자리는 거의 없었다.

사건 당시 구속자 대부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사이였던 것은 이렇듯 젊은 남자 실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사장 잡역부 일도 1971년 사건 후에나 간간히 생겨났다(하동근 구술 2011/06/02). 단지 안에서 행상을 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지만 워낙 빈곤한 처지들이라 "생선 바구니를 이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골목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아침에 생선을 나눠 따로 팔러다녔던 남편뿐"인 지경이었다(박태순 1971, 260).

당장의 생계도 문제였지만 아이들 교육도 숙제였다. 이농해서 도시로 온 까닭 중 하나가 자녀 교육 문제 때문이었지만 1971년 8월 현재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5개, 중학교 2개뿐이었다. 초등학교는 한 학교당 학급 수는 평균 11개, 학급 당 학생 수는 60.3명꼴로 3천3백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성남시사5 2004, 80-96).[21] 1970년 현재 국가 전체 인구 3천88만 명 중 6~14세 아동은 약 8백6만 명으로 26.1%였으며 이 중 90.4%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다.[22] 1971년 성남시 인구는 대단지 건설 이전 거주자 2만 5천 명을 포함해 15만 9천557명이었고(성남시사5 2004, 87) 6~14세 아동은 국가 전체와 같은 비율로 보았을 때 4만1천6백 명 정도였다. 즉 취학아동 중 8%만 겨우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아동들이 매일같이 서울의 학교로 등하교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어려운 형편에 서울에 따로 거처를 두고 자녀가 학교에 다니게 할 수도 없었다.

송상복은 광주단지로 이주하던 1969년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주 후 학업을 중단하였고, 1968년 말 이주한 이태영도 성동상업전수학교[23]

---

21) 광주대단지 건설 이전 광주군 중부면에는 복정초등학교(1967/03/18 설립)와 풍생중학교(1966/12/19)가 있었고 대단지 건설 이후 남수정초등학교(1990/03/01), 성남제1초등학교(1970/03/02), 수진초등학교(1970/11/30), 중원초등학교(1971/03/01), 성남서중학교(1971/01/30)가 설립됐다.

22) 통계청, 통계표ID: DT_1IN7002, 통계표명: 행정구역/성/연령/교육정도별 인구(6세 상), 자료다운일자: 2012/05/11 13:50:38

23) 지금의 성동고등학교.

2학년을 끝으로 학업을 중단하였다. 이태영은 동생이 셋인데 광주단지로 이주해 오면서 동생 둘은 학교를 그만두었고 나이가 어렸던 막내동생만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 용산에서 고등공민학교를 다녔던 김철도 대단지로 오면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1970년대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던 때였다. 1970년 초·중·고 취학률은 각각 90.0%, 36.6%, 20.3%였다가 10년 뒤인 1980년에는 97.7%, 73.3%, 43.3%이었는데 중·고등학교 경우 두 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1990년에는 100.5%, 91.6%, 79.4%로 상승했다.[24] 그러나 유독 광주대단지 이주민만이 소득 상승은 물론 교육 기회까지도 차단당한 채 빈곤이 심화되고 재생산되었다. 이는 광주대단지가 다른 정착지와 달리 '완전히' 격리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었다.

서울로부터 격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 갈수록 먹고살기 힘들어진 광주단지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그 공포는 삶의 비참함에서 나온 것이었고,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급기야 '산모가 갓난아기를 삶아먹었다'는 전설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당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청계천 주변의 인쇄공이었던 한 가장이 아내가 허기에 지쳐 실성해 갓난아기를 삶아먹었다고 하며 목을 매 자살했다고 하는 이장의 생생한 증언에 치를 떨었다. 직접 보고 들은 현장을 오히려 걸러서 광주대단지 르포를 꾸몄다(신동호 2005).

> 그런 소문이 퍼져 있습니다. 남편은 서울 다녀온다고 나간 지 일주일

24) 『서울경제신문』, 2007/09/12, "교육인적자원부 발표" (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709/e2007091217005370300.htm).

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산모는 그동안 꼬박 굶었다 어린애를 낳았는데, 삶아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사실이다, '데마고그'다, 얘기도 있고. 수진리에서 일어났다는 얘기, 상대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도 하고 … 신문사 지국에서 만원 현상 걸고 '소스'를 캤는데 실패했다는 소리도 있고. 내 생각에는 사실이라 해도 비정상적인 일로서 관심을 둘 것은 없다고 보지만. 산모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도 하지만. 글쎄요. 광주단지가 하도 비참하니까 비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밤에 시장에 나가면 쓰레기 통 뒤지는 사람 많습니다(박태순 1971, 281).

공포스러운 소문들은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에서 나온 것이면서 동시에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아기를 삶아 먹은 산모'의 이야기는 사실이기도 했고 아니기도 했다. 그만큼 대단지 주민들은 공포를 전유하였다. 공포를 낳게 한 부정적인 사회 조건들을 전유하면서 공포와 공포의 또 다른 이면인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전유하였다. 그들이 전유한 공포와 불만은 광주대단지 사건에 가서 대거 분출되었지만 그 이전에도 작은 규모로 항상 분출되고 있었다.

주민들의 공포와 불만은 사소한 다툼과 폭력 등으로 분출되었고, 이는 거꾸로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이전부터 바깥세상에서 광주단지를 '무법천지'로 규정하도록 만들었다. 일간지에 "광주군 중부면 대단지 내에 29일 현재 폭력배들이 날뛰고 있어 10여만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경향신문 1971/06/17)"라고 보도되는가 하면 1970년 5월의 대통령보고서에 "식생활에 쪼들린 나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신경질적이며 저녁에는 폭행 등 싸움사건이 많음(대통령보고서 1971/05/16)"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듯 빈곤에서 온 강제 이주와 고립, 고립이 낳은 빈곤의 악화, 여기서 발전한 불만과 공포가 바로 대단지 사건의 심리적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 광주대단지 사건과 두 번째의 사회적 배제

광주대단지사건은 기왕의 사회적 배제를 심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유지들의 목적은 100% 달성된 반면 대다수 이주민들은 밀가루 몇 포대와 가끔씩 돌아오는 일자리 외에는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 정부가 대단지 주민들의 생계 대책 외에 다른 차원의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그 대책은 주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였다.

사건 이전 정부에서는 대단지 주민들을 온건세력으로 판단하고 있었고 이 때문에 대규모집회를 갖겠다는 대책위원회의 사전통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정부 측은 별다른 준비 없이 8월 10일을 맞았다. 양택식 서울시장이 예정시간에 늦은 이유도 명확치 않다.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연장시켰기 때문"이라고도 하고(신상웅 1971, 127), "워커힐 어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이라고도 했다(박태순 1971, 261). 집회군중의 수가 예상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집회 초기 최소한의 경찰도 배치되지 않았고 양 시장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8·10 이전까지 대학생 시위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시위가 없었다는 점과 서울시와 정부 측이 광주대단지 주민들을 비교적 '온건'하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빈곤계층을 사회 불만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지만 "생활고에 허덕이고 있는 데 반하여 정부에 관한 기대감은 뚜렷"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1969년 "9·14 국민투표 시 찬표 90%"인 데서 기인했다(대통령보고서 1971/05/16). 또 집회 통고가 전성천 등 친정부세력에 의해 이뤄진 것도 한 이유일 것이다. 집회 주최와 참여 세력 모두가 정부가 보기에는 정권에 위해가 되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사건 이후 신속한 대처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가 조금 넘어 광주단지에 도착한 양택식 시장은 즉석에서 이주민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상황에 대처했고 정부도 발빠르게 사태 파악에 나서고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런 대처는 대단지 주민들을 반정부세력이 아니라 생활고에 허덕이는, 그래서 생

〈표 3〉 광주대단지 현안문제 해결 보고
(대통령보고서 1971/08/11 밑줄은 보고서 원문 표시)

각하의 지시(대비정150-63 71.9.23호)에 의하여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였기 보고드립니다.

…

4. 치안 및 소방 대책

가. 성남경찰서 신설

(1) 5개 과, 187명 정원

(2) 10개 파출소 설치, 정보 및 특수 수사요원 보강

(3) 집단적 행동에 대비하여 사전동향을 파악하고 진압부대 편성. 자체진압부대 103명 365개의 장비 보유, 인접 5개 지역 190명 및 서울 경찰기동대 492명의 지원체제 확립.

…

6. 민심의 동향과 대책

가. 문제점

(1) 현지주민은 서울시로부터 추방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있고 서울특별시로의 편입운동을 전개하고 있음

(2) 저소득층의 집단화로 생계에 대한 불만이 조직화할 우려가 있음

(3) 지가가 하락하고 경기가 후퇴될 것이라는 데서 오는, 기대에 어긋났다는 불만

(4) 집단행동으로 의사를 관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나. 대책

(1) 위의 해결방안과 조치 내용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광주단지 계획을 1973년가지 수행한다는 것을 주민에게 주지시켜 민심을 순화시킴

(2) 일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중산층을 유치토록 함

활고만 해결해주면 우호세력이 될 수 있는 사람들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건 이전까지 온건세력이었던 주민들은 사건 이후 추방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불만을 조직화하고 집단행동으로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반사회집단'으로 바뀌었다. 〈표 3〉에 보이듯이 사건 이후 정부는 대단지에 경찰병력과 정보·수사요원을 추가 투입했고 이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억압체계를 조성했다.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있지요? 술 마시다 잡혀가는 사람들 많았어요(이태영 구술 2011/06/02)"라는 증언처럼 유신체제에서 막걸리간첩이 유행하긴 했지만 광주대단지에서는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 되었다. 윤흥길의 「아홉 켤레 구두로 남은 사내」도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뒤 일상적으로 감시를 당하는 한 사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건 이후 대단지는 잔뜩 겁을 먹고 숨을 숙이는 동네가 되었다. 박태순은 그의 소설에서 당시 이런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 이상하게도 나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아이들 대여섯 명이 경정거리며 뛰놀고 있는 것이 돋보여지고 있을 만큼 별촌동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황량하였다. 이른바 '별촌동 소요사건'이 이곳에서 불과 나흘 전에 일어났었다고는 도저히 믿기워지지가 않았다(박태순 1972, 433).

"아무도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했던 "전설같이 꾸며진 광주단지"의 여섯 시간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뒤 다시 아무도 모르게 숨죽어 버리게 된 것이다. 사건의 여파로 광주대단지는 숨죽인 도시가 됐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에도 어려움을 가져왔다. 정부와 언론에서 광주대단지 사건을 '폭동' '난동'으로 규정지으면서 이후 성남시민들은 폭동과 난동을 일삼는 반사회세력이 되었다. 또 "아무도 어떤 곳인지를 알지 못(박태순 1971, 254)"했던 광주대단지는 '산모가 아이를 삶아먹는' 괴괴하고 흉측한 곳이 되었다. 성남시민들은 어디 가서 성남시에 산다는 얘기를 떳떳이 밝힐 수 없었다. 윤흥길의 소설 「엄동」에서는 성남시민이 갖는 상대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다루면서 성남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뜻밖의' 인물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다. 하동근도 "당시에는 회사에 이력서 낼 때 주소를 성남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취업이 잘 안 되었거든요"라고 증언했다(하동근 구술 2011/06/02).

윤흥길의 연작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창

백한 중년」, 「날개 또는 수갑」에서도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인한 대단지 이주민의 신분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권씨는 선량한 소시민이었다가 우연히 광주대단지 사건에 휘말리면서 이후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게 된다. 권씨는 작가 윤흥길이 성남시에 살던 당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우연히 만난 실제 인물로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윤흥길 1978, 262-265). 송상복 역시 구속자 중에 대졸 출신이 한 명 있었다고 증언했다(송상복 구술 2011/06/10). 선량한 소시민이었던 권씨는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당했다가 풀려난 뒤 계속된 경찰의 감시 속에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된다. 결국 권씨는 광주단지의 다른 도시빈민(주로 철거민)들처럼 건설일을 하거나 일없이 노는 실업자가 되면서 도시빈민으로 전락하고 만다(윤흥길 1977b). 아내의 병원비가 없어 세 들어 살던 주인집에 도둑질을 감행한 뒤 도망간 권씨는 사회낙오자가 되어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윤흥길 1977c). 소시민으로서의 의식과 도시빈민으로서의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권씨는 우연한 기회에 공장에 취업해 산재사고를 목격하게 되고(윤흥길 1977d),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긴 뒤 참여적 지식인노동자로 변모한다(윤흥길 1977a).

그러나 소설과 달리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권씨가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것까지는 사실이지만 그 뒤에 참여적 지식인노동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현실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반면 사건 관련 구속자 대부분은 이후 참여적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울분을 키워가며 '운동권'을 적으로 간주했다. 송상복은 "80년 광주시민들이야말로 방화와 파괴를 일삼은 진짜 폭도"이고 자기들은 너무 먹고살기 어려워서 별 수 없이 나선 희생자들이며 폭도들인 80년 광주 관련자는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었는데 자신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없는 데 대해 분노했다(송상복 구술 2011/06/10). 면담을 거부한 2인도 비슷한 심정을 토로했다. 1972년 1월 구속된 21명 중 실형을 살게 된 2명[25]을 제외한 17명 또는 19명이 출감하고 한 달쯤 지나 한 민주화운동단체에서 이들을 모두 명동의 모처로 초청해 감

사패를 주고 식사를 하였다. 이 자리에는 고 함석헌 옹도 있었다. 그러나 구속자들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 다시는 관계하지 않았다고 한다(송상복 구술 2011/06/10).

구속자들의 경우 명동 모임 이후 바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는 등 늘 감시가 뒤따랐기 때문에 어떠한 '사회참여적' 행동도 하기 어려운 상태였겠지만 구속자를 포함해 사건 참여자들이 광주대단지 사건의 영향으로 어떤 각성이나 의식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전보다 더욱 위축되어 숨죽이고 살았을 뿐이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이후 주민교회 이해학 목사로 대표되는 외부 사회운동세력이 들어오면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다.

7. 맺는 말

불과 6시간 동안 일어난 광주대단지 사건의 두 중심적인 주체인 전매입주자와 철거민은 서로 이질적일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였다. 전성천과 전매입주자들은 철거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양보를 얻어냈다. 반면 전성천 등이 재산상 이득을 보는 동안 시위 참가자 일부는 검거돼 구타를 당하고 1년여 동안 구속되어야 했다.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구속된 21인은 전성천을 대신해 희생된 것에 다름 아니었다. 기획자이자 주동자라고 자처한 사람을 놔두고 애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가야 했던 이유는 전성천 등이 사건 다음 날 서울시장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사과하고 변명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검찰 진술에서 구속자들이 집회종료 선언과 해산 지시를 무시하고 3만 명과 공모해 폭력시

25) 당시 언론 보도, 「전성천 회고록」에서는 4명으로 기록.

위를 했다고 고발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전성천과 박진하 등 대책위원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가. 전성천은 영치금 몇 푼으로 세상은 물론 구속자 가족에게도 성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구속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방조했던 자신들이 문책을 면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다. 반면 나머지 주민들은 폭동과 난동의 주범이 되어 일상적으로 감시당하고 이력서에 주소마저 떳떳이 밝힐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버렸다. 또한 전성천 등에게 대단지 사건은 오로지 '성공'이었고 그 공로는 제일교회와 대책위 간부들의 것이었으며, 미안한 사람은 경찰서장과 군수, 돌을 맞아가면서도 '발포'하지 않은 경찰관들이었다.

철거민들은 빈곤 때문에 삶터에서 쫓겨나 광주대단지로 강제이주당하면서 첫 번째 사회적 배제를 겪어야 했고 그것은 빈곤의 악화와 교육기회의 차단을 낳았다. 국민 대부분의 소득이 올라가고 교육을 통한 신분 상승을 꿈꾸던 시기에 대단지 주민들은 '산모가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의 굶주림에 시달리며 불만과 공포로 날을 새워야 했다. 그리고 사건 이후에 맞게 된 두 번째 사회적 배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주민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성남시 역사에 상처로 남아 있다. 구속자들을 포함한 철거민들은 가족들에게도 아직까지 당시의 사건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폭동과 난동의 주범은 아니더라도 산모가 아기를 삶아 먹을 정도로 굶주렸던 당시의 가난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성남시 역사에서 1971년 8월 10일 그 날이 있었던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덮고 가기를 요구한다. 2012년 8월 11일 광주대단지사건 40주년을 맞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당초 성남시 주최로 열릴 계획이었으나 성남시의회의 반대로 성남지역언론사대표자협의회가 주최가 됐다. 그 자리에 참석한 시의원 일부는 "부끄러운 일을 왜 굳이 다시 꺼내려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광주대단지 사건에서 철거민들은 도시 하층민으로 '말하지 않는 자' 또는 '말할 수 없는 자'였으며 1970년대 한국사회의 하위주체였다. 그리

고 전성천은 이들을 '대신해 말한 자'였다. 전성천 등은 말을 대신하는 것을 넘어서 그 역사와 결과물도 독식하였다. 광주대단지 사건 이후 정부가 내놓은 조치들은 대개 전매입주자들의 이해를 만족시켜준 것이었다. 철거민들은 다수의 분양권을 가진 유지세력과 전매입주자들의 집단민원을 도시봉기로 이끌어 결국 박정희 정권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으나 봉기의 실질적인 결과와 주도 세력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그리고 사건 이후 광주대단지의 철거민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야 했다. 한편으로 전성천을 비롯한 집단민원의 기획자들, 스스로 주동이라 자처한 이들을 대신해 감옥에 가야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배제가 심화되어가는 속에 더욱 숨죽이고 몸을 사려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제 말하지 않은 자들의 몫을 역사에서나마 돌려줄 때가 되었다.

참고문헌

김수현. 2006.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 원. 2006.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_____. 2008.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연구." 『기억과 전망』 18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6-363.

김재준. 1971. "광주단지에는 50여개의 교회가 있다는데." 『기독교 사상』 15집 11호. 대한기독교서회. 54-57.

김희석. 1999. "집단이주지역의 국유지변상금부과실태와 민원해결 방향 - 서울특별시 구로구를 중심으로." 『지방행정』 48권 550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47-155.

박기정. 1971. “르뽀 광주대단지.”『신동아』 10월호. 동아일보사. 168-179.
박태순. 1971. “르뽀 광주단지 4박5일.”『월간 중앙』 10월호. 중앙일보사. 254-287.
_____. 1972. “무너지는 산—외촌동사람들14.”『창작과 비평』 가을호. 창작과비평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2005a.『서울행정사』.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_____. 2005b.『서울인구사』.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성남시사편찬위원회 편. 2004.『성남시사 1~5권』. 성남시.
손정목. 2003. “광주대단지 사건.”『도시문제』 11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89-109.
신동호. 2005. “긴급조치9호세대 대탐험.”『뉴스메이커』 556호. 경향신문사.
신상웅. 1971. “르뽀 광주대단지.”『창조』 10월호. 창조사. 118-133.
윤흥길. 1975. “엄동.”『현대문학』 3월호. 현대문학사.
_____. 1977a. “날개 또는 수갑.”『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_____. 1977b.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창작과 비평』 여름호. 창작과 비평사.
_____. 1977c. “직선과 곡선.”『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_____. 1977d. “창백한 중년.”『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문학과지성사.
_____. 1978. “스티브 같은 사내.”『젊은 작가의 일기』. 문학예술사.
이근무. 1971. “혼란속에 선 그리스도: 광주대단지주민 소동.” 기독교 사상 15집 11호. 대한기독교서회. 54-57.
이승원. 2009. “하위주체와 4월혁명.”『기억과 전망』 20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82-216.
전성천. 2001.『전성천 회고록: 십자가 그늘에서』. 동영사.
정희정. 2004.『윤흥길 소설 연구—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하동근. 2001. “8.10사건을 풀어헤치는 일들의 의미.”『8·10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8·10 30주년기념추진위원회.
_____. 2005. “8·10사건에 대한 입장들.”『광주대단지 사건의 역사적 재조명’ 학술회의 자료집』. 성남문화원.

〈언론기사〉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조선일보』.

〈기타〉

「대통령 보고서」. 1970/05/16. 보고번호 제70-305호. 보고관 김태경.
_____. 1971/08/04. 보고번호 제71호. 보고관 정종택.
_____. 1971/08/11. 보고번호 제71-458호. 보고관 정종택.
_____. 1971/10/14. 보고번호 제71-631호. 보고관 정종택.

〈구술 사료〉

구술자	면담일	생년	현직	대단지 이주 형태	시위 참가 및 구속 여부
김 철	2011년 11월 10일 면담	1952년생	사업	철거민	구속
박기연	2011년 11월 9일 면담	1951년생	택시 기사	철거민	구속

송상복	2011년 6월 10일 면담	1954년생	택시 기사	이재민 (마포화재) 입주자	구속
이태영	2011년 6월 2일 면담	1954년생	경기건설학교 교장	철거민	시위 참가
이해학	2011년 6월 8일·16일 면담	1945년생	성남시 주민교회 담임목사 (2012년 퇴임)	1973년 교회 설립 목적	시위 당시 부재
하동근	2011년 6월 2일·10일·17일 면담	1953년생	성남문화재단 사업국장	모란단지 이주민	시위 당시 부재

투고: 2012.3.31 심사: 2012.4.7 확정: 2012.5.1